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자료

2025. 7.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I. 지방계약 개정사항 설명회 계획

□ 설명회 개요

- (일자) '25.7.17.(목), 7.22.(화)
- (방식) 영상회의
- (대상)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지방공기업 등 계약 담당자
-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 (개정사항) 일반관리비 상향, 물가변동 요건 완화,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등
 - (질의응답) 지방계약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 설명회 일정

일자	시간	참석대상
7.17.(목)	14:00~15:00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7.22.(화)	14:00~15:00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 진행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14:30	30'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설명	계약제도팀장
14:30~15:00	30'	■ 지방계약 관련 질의응답	계약예규팀장

□ 회의 참석 방법

- (지자체) 온나라 영상회의(내부망) 참석 ※ 비밀번호 3784
-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 검색창에 "온나라 영상회의" → "민간 공공기관영상회의" 선택 → 본인 이름 및 코드번호 "6573858b" 입력 → 입장
※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

II.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추진배경

-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
 - ※ '25.3.31.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청년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정비

□ 주요 개정사항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 계약해지·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영§26,§73)
 - 현행**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개선**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 시점 조정
- 단일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 완화(영§73)
 - 현행** 특정 규격의 자재 중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
 - 개선**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가격증감률 **10% 이상**으로 완화
- 일반관리비율 현실화(규칙§8)
 - 현행**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분야 일반관리비율은 **6% 이내**에서 산정
 - 개선** 공사분야 일반관리비율 **8% 이내**로 상향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사유 확대(영§110)
 - 현행** 종합공사의 경우 발주규모 **10억 이상**만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
분쟁사유는 부당특약·계약금액조정·지연배상금·계약기간 연장으로 한정
 - 개선** 발주규모는 종합공사 **4억 이상**으로 완화,
분쟁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 추가

- 부정당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영§92의2, 규칙[별표3])

현행 계약이행 부실 등 책임이 경미한 9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개선 책임이 경미한 사유에 '입찰참가·계약체결 등 방해' 추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규칙[별표2])

현행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11개월~1년1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개선 손해액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의 경우 11개월~1년1개월,
5억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등 2개 구간으로 제재기간을 세분화

< 청년창업기업 등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통한 청년창업기업 지원(영§25, §30)

현행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만 지자체와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개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발주기관 편의 제고(영§37)

현행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으로 21개 조합·협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규정

개선 보증기관에 「조달사업법」에 따라 신설('24.12.)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

□ 개정 시행 : '25.7.8.

- (재공고입찰 물가변동) 시행일 전 기술형입찰 발주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고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
- (계약해제·해지 물가변동)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에도 적용
- (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 시행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도 적용
- (일반관리비 상향) '25. 8. 9.

III.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

1.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계약해지·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

(영§73,§26, 규칙§32조의2)

- (현황)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부터 3% 이상 물가 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 (필요성) 기존 계약이 존재하거나, 계약내용·금액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도, 적정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효자~상원간도로 건설공사(경북)의 경우, 최초 공고일부터 4년 2개월후 수의계약 체결

- (개선) 물가변동 적용 시점 조정·보완

구 분	현 행	개 선
① 계약 해제·해지	수의계약 체결일	입찰일 (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종전 계약체결일)
② 재공고 유찰 (기술형입찰에 적용)	수의계약 체결일	입찰일

② 단일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 완화(영§73)

- (현황) 특정 규격의 자재 중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 가능

- (필요성)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에 맞춰 물가변동 적용 확대 필요

※ 최근 1년간 철강가격 경우 국제는 70~100%, 국내도 30~40% 이상 상승('24.10. 산업연구원)
이형철근의 경우 14.29%('21.3.) 13.94%('22.5.) 상승한 바 있음

- (개선)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0% 이상으로 완화

③ 일반관리비율 현실화(규칙§8)

- (현황) 원가산정기준은 '89년 도입 이후 3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 그간 변화된 사회여건(안전규제, 고금리 등)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

▶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여, 교통·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비율(5~6%)

- (필요성)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제비용 증가, 현장의 품질·안전기준 강화 등에도 낮은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업체 부담 가중

* 일반관리비 실 투입 비율은 최대 10.9%, 중소건설업은 13.9%에 달함(건설산업연구원)

- (개선)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을 1~2%p 상향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공사규모	현행	개선	공사규모	현행	개선
50억 미만	6.0%	8.0% (+2.0%p ↑)	5억 미만	6.0%	8.0% (+2.0%p ↑)
50~300억	5.5%	6.5% (+1.0%p ↑)	5~30억	5.5%	6.5% (+1.0%p ↑)
300억 이상	5.0%	(현행 유지)	30억 이상	5.0%	(현행 유지)

④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영§110)

- (현황) 분쟁조정(이의신청)은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청구 가능

- (조정대상) 종합공사 10억원, 전문공사 1억원,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

- (분쟁사유) 부당특약, 계약금액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한정

※ '14.2월 금액 기준 최초 완화 후 변동 없음(종합 30억→10억원, 전문 3억→1억, 기타공사 3억→8천만원, 물품·용역 1억5천만원→5천만원)

- (필요성) 소송에 비하여 조정 기간·비용 측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하므로, 권익구제 확대 차원에서 분쟁조정 대상 확대 필요

※ '24년 기준 "4억 이상 10억 미만" 공사는 계약건수 기준 57.0%(5,752건), 계약금액 기준 16.6%(3.5조)를 차지, 발주 규모 4억까지 인하시 청구 증가 예상

- (개선) 종합공사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 추가

5 부정당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영§92의2, 규칙[별표3])

- (현황)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중 책임이 경미한 경우(계약이행의 부실·조잡·부정 등 9개) 과징금으로 대체
- (필요성)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 필요

※ (국가계약) '23.11. 경미한 위반 대상을 확대(9개→12개)

- ①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손해발생, ②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 제출,
- ③입찰참가·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방해

- (개선) 책임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 확대(1개 추가)

현행	①계약이행의 부실·조잡·부정, ②하도급 관련의무 위반, ③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 ④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미체결, 불이행, 조건위반 등, ⑤감독 또는 검사 시 검사 수행방해, ⑥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부당교체, ⑦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대책 소홀, ⑧전자정부법상 정보누출금지의무 위반, ⑨전자정부법상 시스템 방치
개선추가	⑩입찰참가·계약체결 등 방해

※ 국가계약 개선사항 중 ①,②는 지자체의 반대의견으로 제외

6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규칙[별표2])

- (현황)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1년10개월~2년, 10억 미만인 경우 11개월~1년1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필요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억원인 경우와 9억원인 경우 손해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이 동일한 문제 발생

※ (국가계약) 10억 미만을 3개 구간(5~10억, 1~5억, 1억미만)으로 세분화('25.1.)

- (개선) 손해액 10억 미만의 경우 제재기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 이상) 22개월 이상~24개월 이하 • (10억 미만) 11개월~13개월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이상) 22개월 이상~24개월 이하 • (5억~10억원) 11개월 이상~13개월 미만 • (5억 미만) 5개월 이상~7개월 미만

2. 청년창업기업 등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을 위한 개선

①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통한 청년창업기업 지원(영§25①5, §30①2)

- (현황)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만 지자체와 계약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 (필요성) 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해 공공조달 등 판로 확대** 지원 필요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중기부에서 세부기준 운영

** (국가계약) '24.12. 기 개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25.4.1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개선) 청년창업기업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허용

※ 1인 수의계약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②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발주기관 편의 제고(영§37)

- (현황) 보증서 발급기관은 건설공제조합 등 21개 기관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정

- 조합에 가입되지 않거나, 재정 문제로 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특정 보증사*의 높은 보증수수료율(0.31%) 부담 중

* '23년 조달청 물품·용역 계약보증수수료(80.1억원) 중 A社가 76.4%(61.2억원) 차지

- (필요성) 보증서 발급기관을 다양화하여 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

* 조달기업공제조합 평균 보증수수료율 0.156%

※ (국가계약) '24.12. 조달기업공제조합을 기 추가

- (개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12. 설립된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

IV.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내용

1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포함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현황)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만 가능
- (필요성) 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공조달 등 판로 확대 지원 필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 개정내용

- 청년창업기업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허용

현						개					
행						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요 내용				구분	유형	주요 내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기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기타
2인 이상 견적 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1인 견적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신설)				1인 견적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현행					개정안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분	유형	주요내용				구분	유형	주요내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공사	용역·물품기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공사	용역·물품기타
1인 견적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인 견적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신설)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7) (신설)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현황) 원가산정기준은 '89년 도입 이후 3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 그간 변화된 사회여건(안전규제, 고금리 등)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

▶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여, 교통·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비율(5~6%)

- (필요성)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제비용 증가, 현장의 품질·안전기준 강화 등에도 낮은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업체 부담 가중

* 일반관리비 실 투입 비율은 최대 10.9%, 중소건설업은 13.9%에 달함(건설산업연구원)

□ 개정내용

-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을 1~2%p 상향

현행				개정안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미만	8.0	5억 원 미만	8.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6.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6.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현황)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부터 3% 이상 물가 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 (필요성) 기존 계약이 존재하거나, 계약내용·금액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도 적정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효자~상원간도로 건설공사(경북)의 경우, 최초 공고일부터 4년 2개월후 수의계약 체결

□ 개정내용

-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종전 수의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신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		

현행	개정안
<p>나고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신설)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 (신설)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p> <p>2. 정의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p> <p>(신설)</p>	<p>나고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p> <p>2. 정의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p> <p>아. “물가변동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말한다.</p> <p>1)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의 품목조정을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p>

현행	개정안				
<p>3. 수의계약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172 958 778 1115"> <tr> <td data-bbox="172 958 379 1115">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td><td data-bbox="379 958 778 1115">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신설) 등 고지(신설)</td></tr> </table> <p>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p> <p>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p> <p>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신설)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마. 가격협상</p> <p>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p> <p>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p> <p>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p> <p>(신설)</p>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신설) 등 고지(신설)	<p>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해 '4라'에 따른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p> <p>2)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의 지수조정을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p> <p>가) 입찰당시가격 : '2-아-1)-가)'와 동일</p> <p>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은 제1장 제7절을 준용</p> <p>3. 수의계약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810 958 1417 1227"> <tr> <td data-bbox="810 958 1018 1227">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td><td data-bbox="1018 958 1417 1227">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td></tr> </table> <p>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p> <p>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p> <p>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마. 가격협상</p> <p>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p> <p>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p> <p>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p> <p>다)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다.</p>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신설) 등 고지(신설)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